

## 도내 건설수주 하반기도 흐림

대형공사 완료·공급 위축 원인  
정부 SOC 예산축소도 악영향

도내 건설업계의 수주난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총 수주금액은 7,878억3,04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658억 9,293만원) 줄었다. 또 6월 수주물량도 3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했다. 도회는 수주물량의 하락 원인을 대규모 공사물량의 감소와 주택시장 위축 등으로 꼽았다.

이 같은 추세는 하반기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완공을 비롯해 올림픽 관련 각

종 사업이 마무리돼 대규모 공사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공사물량이 상반기에 집중돼 수주가뭇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원주, 강릉 등이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급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주택시장 공급 과잉도 건설투자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회는 지난 10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SOC 예산 축소도 수주난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회 관계자는 “수주금액을 평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수주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유재규기자 koo@

## 내년 도 국비 5조2,700억 반영 신규 교통망사업은 전부 제외

민생안정분야 3조5,000억 달해  
국비 전년보다 1조 가까이 줄어  
올림픽 관련 사업 마무리 영향

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5조2,700억원대의 현안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 5조2,000억원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9월1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도는 최근 3년간 평창 동계올림픽 교통망 등 대형SOC 사업으로 국비 6조원 시대를 이어왔다.

올해를 끝으로 고속도로와 철도, 올림픽경기장 접근도로망이 모두 완공되면서 내년 정부예산에 SOC 예산만 1조원 가까이 줄었다.

분야별 사업비는 SOC 9,470억원, 문화·관광·체육·관광지역개발 830억원, 경제활성화 1,950억원, 지역발전사업 5,540억원, 민생안정 국민안심사업 3조4,960억원 등이다.

주요 SOC 예산은 포항~삼척 철도(1,246억원), 원주~제천 철도(1,500억원), 경원선 철도(659억원), 동해항 3단계 개발(1,358억원) 등 9,470억원이다. 하지만 신규 교통망사업은 모두 제외됐다. 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2경춘국도 사업을 국회예산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설계비 10억원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문순지사는 29일 대책 회의를 열고 SOC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경제활성화 관련 사업은 일자리 분야(689억원), 지역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525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특성화시장 육성(165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저소득층 복지향상(1



◇최문순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도 국비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김남덕기자

조3,061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및 농업생산기반정비(767억원), 재해위험 지역정비(743억원) 예산도 반영됐다. 주요 신규사업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482억원),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151억원), 수소연료전지차보급(33억원) 등이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 자치분권국가 기틀 마련 - 1면에서 계속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 주도로 지방자치 책임성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마을자치와 사회혁신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현안 해결 공모프로젝트를 추진해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의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서울=유병욱기자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30일 오후 6시 서울 논현동 대한건설회관 본부에서 열리는 제8차 시·도

회장 회의에 참석.

내년 정부 예산 429조 확정 ... 복지 146조 사상 최대

올해보다 7.1% 증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6면

예산안에 따르면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도 보건·복지·노동으로 12.9% 늘었다. 교육(11.7%)과 일반·지방행정(10.0%) 등도 전체 예산 증가율을 웃돌았다.

보건·복지·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총 146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전체 예산안에서의 복지 예산 비중은 3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

갔다. 이중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20.9% 증액됐다. 또 교육 예산은 64조1,000억원으로 11.7% 늘어난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할 경우 210조원이 넘어 전체 예산의 절반(49%)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6,000억원으로 10% 늘어난다.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증액됐다. 국방 예산(43조1,000억원)은 6.9% 늘어나고,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5.2% 늘어난 4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서울=유병욱기자

법무법인 일헌 변호사 김혜란

- 춘천여고(58회)
- 서울대, 사법시험(45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2014. 2. 퇴직)
-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위원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은 전문변호사에게!

☎ 033) 747-8050 ~2

원주시 무실사골길 14, 법조빌딩3층(무실동)/법원 옆

# 도, SOC사업 우선순위 '제2경춘국도 건설'

최문순 지사, SOC 관련 조정회의  
경춘고속도로 통행료 단계적 인하  
김진태 의원 '예산 반영시키겠다'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내 주요 SOC사업 예산이 대부분 제외  
된 가운데 강원도가 SOC 우선 순위로 제  
2경춘국도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문순 지사와 도 지휘부는 29일 오후  
도청에서 주요 SOC 관련 조정회의를 갖  
고, 동서고속도로 개통 후 서울-춘천 구간  
정체가 심각함에 따라 제2경춘국도 건설  
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춘천-철원 고  
속도로, 강릉-고성 제진철도, 경원선(백  
마고지-군사분계선)철도 등 3개 사업은  
통일SOC로 분류,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을 시기, 국가적 상황과 연계해 남북교  
류협력기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순위를 놓고 혼선을 빚었던 문제  
인 대통령령의 강원도 공약사업인 제천-  
삼척 ITX와 제천-삼척 고속국도 사업은  
지역사회와 정치권과의 협의 과정을 거  
쳐 추진 순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동해  
고속도로(삼척-속초) 통행료 무료화 등  
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은 정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

은 제2경춘국도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날  
"제2경춘국도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될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물리적으로 반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경춘국도 설  
계비를 이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  
영시켜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진민수 ▶ 관련기사5면

**춘천화남합동법률사무소**

춘천에서 30년 변호사로 활동,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법적인 고민을 도와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이택수 (부동산, 중증)  
변호사 안지연 (이혼, 가사)  
변호사 서승완 (채권, 형사, 행정)

033)254-2000, 254-4368  
춘천시 공자로 283 화남빌딩 6층 (법원앞)

**PRIME ASSET 프라임에셋(주)**

**FC·팀장·지점장·본부장·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프라임에셋은 대한민국 최대의 GA입니다.

☎입사문의 107본부  
이선희 010-2923-1105  
춘천시 동면 목골길 63(프라임에셋 2층)

△정만호 경제부지사△최동용 춘천시장△안병현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이재필 KBS춘천방송총  
국장△송재우 춘천문화방송 사장△김준기 한국은  
행 강원본부장△김건영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장△  
최영순 산림조합중앙회 강원본부장△오인철 대한  
건설협회 강원도회장△김대호 강원도상공회의소  
협의회장△박기주 케이디파워 의장△정경인 한국  
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김영숙 한국여성경  
영자총협회 강원지회장△이선희 강원유업협회  
장△김성태 강원한우 대표이사△정영훈 강원중소  
벤처기업협회장△황환민 강원조달청장△육병렬 강  
원기상청장△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장  
△홍사교 한국무역협회 강원본부장△전주수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장△한종호 강원장조경제혁신  
센터장△서동엽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김은  
광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본부장△이남규 강원신  
용보증재단 이사장△서상건 강원상인연합회장△  
강정룡 도의원△이종주 도의원△유정선 도의원△  
최성현 도의원△안상훈 도의원△정재용 도의원△  
황찬중 시의원△이상민 시의원△박순자 시의원△  
윤재욱 시의원△이원규 시의원△최기영 시의원△  
유호순 시의원△이미옥 시의원△박창모 주택금융  
공사 강원지사장△김준호 한국에너지공단 강원본  
부장△이호철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장△박병직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장△육동한 강원연구원장  
△박승균 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회장△이금선 강원  
발전경제인협회장



29일 춘천 불내체육관에서 열린 2017 강원그린박람회 개막식에서 정만호 도경제부지사와  
참석자들이 축하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강원그린박람회에 참가한 한 관람객이 환경체험관에서 휴지심연필꽃이만들기 체험을 하  
고 있다.

# 박람회 관심고객 유치 판로 개척의 장 되다

개막 첫날 2만여명 방문 복새통  
참가기업 제품 홍보·판매 증가  
그린산업·청정식품 발전 기대

'2017 강원그린박람회' 개막 첫날인 29  
일 도내 우수기업들의 제품을 관람하고  
구매하기 위해 2만여명이 방문. 강원 그  
린산업이 재조명받는 기회가 되고 있다.

더구나 우수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판로  
개척에 부담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이번 그린박람회를 통해 홍보와 판로개  
척은 물론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판매  
경쟁력을 가다듬는 등 기업운영에 한 몫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영희 양구DMZ고추장 대표는 "좋은  
제품이라도 홍보가 더디면 판매에 지장  
이 있는데 지난해 박람회에서 만난 방문  
객들이 꾸준한 단골 손님이 된 것처럼 울

해도 그린박람회를 통해 만난 고객들에  
기대가 높다"며 "이번 박람회에서도 발굴  
한 고객이 많아 제품 판매량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린박람회에 매년 참  
가하는 김기섭 다림앤바이오 대표도 "올  
해도 다기능 화장품으로 고객 유치에 나  
서고 있다"며 "꾸준한 경쟁력 확보로 울해  
도 관심고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강원 그린산업과 청정식품 발전속도  
도 기대되고 있다. 실외부스에 참가한

양구 한도의 황토 구들장 체험장은 박람  
회 개막 한시간만에 많은 체험객들로 복  
새통을 이뤘고, 강원한우가 마련한 부스  
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산림자  
원홍보관도 체험활동에 참여한 가족단  
위 방문객들로 분주했다. 한편 최동용  
춘천시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지역  
의 친환경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계  
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많은 성과  
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관호

文정부 첫 나라살림... 내년 429兆 '수퍼 예산' 확정

# SOC 17.7兆... 20% '씩둑' 건설업계 '투자절벽' 쇼크

올 대비 4조4000억 증발  
역대 최대규모 구조조정

부동산 이어 공공까지  
건설업계 최악의 위기  
일자리·성장률도 비상등

내년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거쳐 17조7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살림살이(총지출)를 28조원 이상 늘리면서도 SOC 예산은 올해 대비 20%, 4조4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다. 4조4000억원은 조달청이 1년간 집행하는 신규 공사 입찰금액의 약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 주택·부동산에 이어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내년 국내 건설시장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 분석이다.

▶관련기사 2·3·4면

뿐만 아니라 SOC예산 축소는 고용시장과 더불어 경제성장률을 견인해왔던 건설투자를 급속도로 위축시킬 것으로 보여 일자리 창출이나 3%대 성장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은 올해(400.5조) 대비 7.1%, 약 28조4000억원 늘어난 429.0조원



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400조를 넘어선 이래 다시 한 번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분야별로는 복지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12.9%, 16조7000억원)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일자리와 국방, 교육 분야 예산도 크게 확대했다. 반면 SOC와 문화·체육·관광, 환경,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구조조정을 통해 삭감했다.

특히 SOC 예산은 올해(22조1000억원·최종) 대비 4조4000억원(20%)이나 줄어든 17조7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07년 지출분야 조정 이후 최소 규모다. 또 3개년 연속 삭감으로 2015년(24조4000억원·정부안) 이후 3년 만에 6조7000억원의 예산이 증발하게 됐다.

SOC 예산은 국내 공공건설 시장과 직결된다. 때문에 강력한 규제 조치로 이미 냉각기에 접어든 부동산 부문에 이어 공공 부문까지, 내년도 건설시장은 급속도로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발주의존도가 높은 지방, 중소건설업계는 극심한 수주난과 더불어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SOC 투자 축소는 국내 경제 전반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 정부 최대 역점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은 지난해부터 매월 국내 취업자 수 증가 폭의 최소 30%에서 최대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고용시장을 견인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SOC 투자를 급격히 줄이면 공무원 등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린다 하더라도, 민간 일자리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미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5년간 SOC예산이 12조원 이상 줄어들면서 일자리 18만개가 사라졌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내년 3%대 성장률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올 상반기에도 국내 경제성장률의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한 건설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SOC 축소로 건설 투자가 위축되면 연간 1만5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향후 4년간 매년 0.53%p의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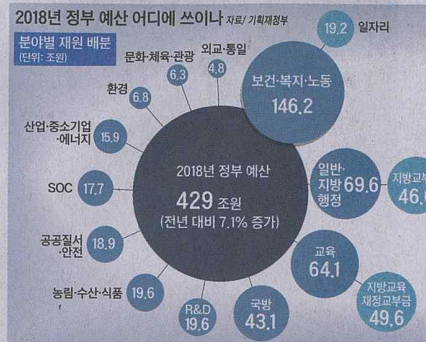
봉승권기자 skbond@

# SOC 연평균 7.5% 축소... 2021년 16.2兆로 추락

##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건설업계 전반 구조조정 확산  
"국가경쟁력 약화" 목소리 높아

보건·복지·교육분야 매년 증액  
전체 나라살림은 5.8%씩 늘어  
사상 첫 500조원 넘어설 전망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총 지출예산)는 연 평균 5.8%씩 늘어나지만 SOC예산은 연 평균 7.5%씩 줄어든다. 이에 따라 2021년 정부의 총지출은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SOC 예산은 16조2000억원 규모로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 및 국가경쟁력 하락 우려와 더불어 건설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총지출은 올해(400조5000억원)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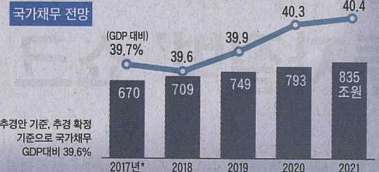
매년 평균 5.8%씩 늘어나 2021년에는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선제적, 확정적 재정운용 기조를 이어가면서 복지 및 일자리 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올해 129조5000억원에서 매년 9.8%씩 늘어 2021년에는 무려 60조원 가까이 증가한 188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국방 분야도 연 평균 5.8~7.0%씩 투입예산을 확대하고 외교·통일 및 공공질서·안전, R&D 분야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릴 계

획이다. 그러나 SOC 분야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환경,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계속 줄어들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SOC에 대해서는 내년 20% 삭감을 포함, 연 평균 7.5%씩 축소할 방침이다. 최소 0.5%에서 최대 1.6%에 불과한 여타 분야의 연 평균 삭감을 압도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전 내놓은 재정운용계획상 감액률 6%(연평균)보다 연 1.5%포인트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SOC 예산은 16조2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총지출에서



SOC가 차지하는 비율도 3.4%로 쪼그라든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고속도로(1위) 및 국도(3위), 철도(6위) 등 SOC스톡이 GS20(주요 20개국) 중 최상위권에 오를 만큼 축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SOC스톡에 관한 평가는 아직 진행형이다. 양적으로 충분해보여도 질적인 수준은 비교 대상국들에 훨씬 못 미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조차 단순 스톡이 아닌 부하지수를 적용하면 내년 2조7000억원, 2019년 3조2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주 타겟으로 SOC를 겨냥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몽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성장체차원에서 경제성장률의 50% 이상을 건설부문에 담당하는 등 건설산업이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SOC투자를 급격히 줄이면)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약화될 것"이라면서 "다구나 노후 SOC에 대한 점검·투자 시기를 놓치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회복세 약화 및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주택 부문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SOC 예산 축소로 공공 부문까지 냉각되면 대다수 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SOC는 고용 효과 등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큰데, 4조원 이상 줄어버리면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최근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며 건설투자가 전기 대비 줄어드는 상황에서 SOC 쪽까지 줄이면 여러 면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을 더 고려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본승권기자 skbgong@](#)

# 국토부, 내년 예산 39조7500억 그쳐

올해보다 1조5600억 줄어  
균형발전·국민안전 등 집중  
연구개발에 4997억원 투입

SOC 예산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총지출, 기금 포함)도 올해(41조3100억원) 대비 3.8% 줄어든 39조7500억원에 그쳤다. 이 중 국토교통 부문 SOC 예산만 보면, 올해 19조6000억원에서 내년 14조7000억원(주거급여 등 복지기금 제외)으로 무려 23%나 급감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이 완료되는 등 대형사업이 자연감소하고, 타부처에 비해 재량지출 비중이 높은 특성상 구조조정 규모가 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나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불용예산 약 2조5000억원 등을 적극 활용해 SOC 예산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는 감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과 국민안전, 서민주거 안정, 도시재생 등 핵심분야 예산은 대부분 확대 편성했다.

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노후주거지 및 구도심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올해 1452억원에서 4638억원으로 늘렸다. 또 혁신도시 건설지원(40억원) 및 해안·내륙권 발전사업(102억원) 예산도 소폭이나마 상향조정했다.

SOC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물 노후화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투자 예산을 3조7084억원에서 3조7880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도로 및 고속·도시철도 내진보강사업(1089억원)과 철도시설 유지 및 개량투자(8711억원)는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충남서부권광역상수도사업(8억원)과 낙안~상사 국지도 건설(2억원) 등 모두 32개 사업, 383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부터 다시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 국내 건설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예산도 263억원에서 285억원으로 증액했다.

내년 국토소관 사업 중 가장 큰 예산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국토교통R&D다. 올해 4738억원에서 내년 4997억원으로 5.5% 늘어났다. 정부 전체 R&D예산이 0.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8배에 달한다. [본승권기자 skbgong@](#)

# 지자체 발주사업 입찰 제한 '제척기간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에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과 관련해 '제척기간 제도'가 도입된다. 입찰제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5~7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나중이라도 과거 잘못 이유로 입찰제한을 받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자체 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10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업체가 자격의 준비

비용을 들며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사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입찰 제한 처분을 받게 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앞으로는 지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부정당업자 위반행위(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방해, 허위 서류 제출 등)가 종료된 때부터 추가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하면 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담합 및 금품제공'의 행위는 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야 입찰참가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권성종기자 kwon88@](#)

내년도 SOC 예산 보니

# 도로·철도부문 각각 2兆 안팎 줄어 GTX A노선 토지보상비 150억 포함

내년도 SOC 예산안을 보면, 지역 및 도시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력한 구조조정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도로와 철도분야 예산이 대폭 줄었다.

도로 예산은 올해 7조4089억원에서 5조4424억원으로, 무려 2조원 가까이 축소됐다. 국토건설 예산은 올해 약 2조7000억원에서 약 1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올해 7조1437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7143억원 규모로 줄어든다. 그중에서 4조4000억원 규모에 달했던 일반철도 건설예산은 절반도 안 되는 2조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수자원 분야 역시 올해 1조8108억원에서 내년 1조6762억원으로 줄었고, 불류, 항공, 산단분야 예산도 2조8086억원에서 2조6272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이 중 산단 조성 예

산은 5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렇다보니 SOC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기금 제외)도 15조91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0.9%나 삭감됐다. 해수부 소관 SOC 예산인 해운·항만분야도 항만개발을 억제하면서 올해 1조7607억원에서 내년 1조7021억원으로 축소됐다.

유일하게 지역 및 도시분야만 올해 예산(1조2028억원) 대비 약 3500억원가량 늘어난 1조5553억원으로 편성됐을 뿐이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그간 축적된 도로, 철도분야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안전 및 재해예방, 4차산업 혁명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사업단 밖도 신규사업은 대폭 줄었다. 도계-영월국도도 등 도로 3건을 비롯해 제주2공항건설 등 항공·공항 4건,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 등 불류 9건

등 모두 32건에 383억원만 반영됐다. 그나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150억원)와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원)가 포함돼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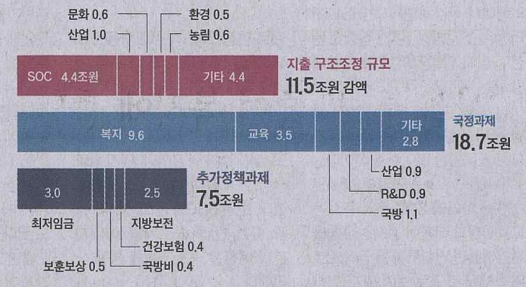
이 외 대부분의 신규 SOC 예산은 재해 예방 및 안전투자, 신산업 대응분야에 배정됐다. 태풍피해복구사업에 249억원, 재해안전항만 건설사업에 874억원이 투입되며 댐 안전성강화 사업과 남강댐 치수능력증대 사업에도 각각 50억원과 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또 특수교량 안전대책으로 90억원을 배정하고 고속철도 나리방지사업 예산을 크게 늘려 1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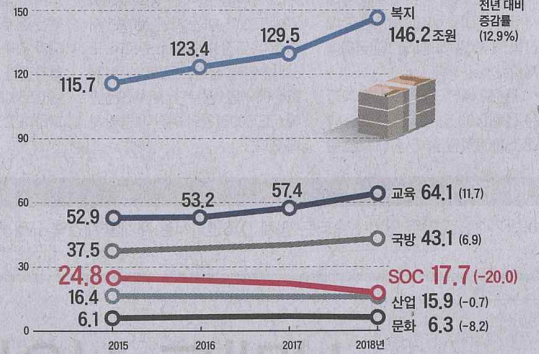
이 밖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투자로, 첨단도로교통체계(C-ITS) 실증사업(2개소) 100억원과 드론전용 시험비행장 추가 조성(2개소)에 4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한편, 기존 사업으로는 최근 재정사업으로 전격 전환된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불승권기자

지출구조조정 및 국정과제 투자 규모



분야별 재원 규모 추이



숨어있는 시설사업 예산 찾아라

## 도시재생에 4638억 투입... 공적임대주택 공급 13兆 지원

내년에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SOC 외 분야에 숨어 있는 시설사업을 찾는 데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 증가율을 보인 보건·복지·고용 분야 중 주택·주거복지 부문에 주목해야 할 전망이다.

새 정부의 최대 건설사업 공약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 예산이 대표적이다. 내년도 도시재생 예산은 올해 1452억원에서 4638억원으로 3배가량 확대된다. 본격적인 재생사업 및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복합개발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금융 지원 대상은 소규모 주택정비 및 상가 리모델링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650억원에서 8534억원으로 늘린 것도 특징적이다. 정부는 또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13만가구), 민

치매안심센터·어린이집 확충 눈길

간임대(4만구) 등 공적 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을 위해 13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1만 가구(총 3만가구)의 추가 공급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 내년에는 치매안심센터(252개소) 및 치매요양시설(192개소) 확충 예산과 공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나 일부는 신규 시설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SOC와 가장 유사한 시설사업을 품고 있는 안전 및 환경 분야도 눈여겨 봐야 한다. 내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총 18조8967억원 규모로, 1조1272억원이 재난관리 사업에 투입되며 이 중 3734억원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

한 예산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하천이나 제방 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노후 하수도 교체·보수 및 물 재이용사업 투자예산이 321억원에서 402억원으로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또 수질개선 투자를 줄였으나 노후 상수도 정비 예산을 512억원에서 1075억원으로 감절 이상 늘려 지방상수도 확충 및 누수 방지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역보건센터 확충 및 야생생물자원관 건립 등에도 예산이 반영돼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 국방 분야의 군사시설 확충 및 예비군 훈련시설 개선 예산 등이 소폭 늘고 문화유산 등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예산이 증가하면서 이 중 일부는 내년 신규 시설사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불승권기자

생애주기별 생활밀착형 예산 사업

<b>보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확대</li> <li>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li> <li>저소득층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li> </ul>
<b>아동·학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이 필요한 아동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li> <li>체육활동에 참여제한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확대</li> <li>실종예방·신속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li> <li>청소년 권리 보호 · 청소년기 영미아티스트 계약학과</li> </ul>
<b>중·장년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전용 임대주택</li> <li>자율주택 정비사업</li> </ul>
<b>어르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매국가책임제 이행</li> </ul>

# 건설업계가 알아야 할 ‘건진법의 모든 것’

건설업은 ‘기술 산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회사를 비롯해 각종 건축물, 버스과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 다니는 도로와 철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SOC) 모두 건설기술이 낳은 산물이다. 이처럼 국민의 삶과 밀접한 건설기술의 생명은 ‘안전’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이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이다.

새 책 <건설기술진흥법령집>은 최근에 바뀐 건진법을 다루고 있다. 변경된 부분을 중심으로 건진법을 전부 훑어볼 수 있도록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건진법의 목적을 설명하며, 전개를 본격화한다.

건진법 1조(목적)에는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건설기술진흥법령집>은 총 2권으로 구성돼 있다. 1권은 건진법을 비롯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권은 주요 훈령 및 고시·지침을 담고 있다.

건진법의 가장 최근 개정은 올해 초다. 올 1분기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업자(사업관리 및 품질검사)의 업무 부실 방지 및

## 건설기술진흥법령집

건설경제



올초 개정된 건진법 중심으로  
시행령·훈령 등 2권으로 펴내

신기술 활용 활성화위한 기준 등  
신설 조항도 수록 ‘궁금증 해소’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을 목적으로 건진법을 개정했다.

우선, 국토부는 제46조 제1항을 개정해 발주청의 건설공사 시행 원칙에 경제성·능력성 외 안전성을 추가해 건설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자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할 경우에 적용했던 행정처분을 품질시험 절차 미준수 등 구체적 사례(미등록 기술인력이 품질시험 실시·미확인 재료로 시험·성적서 통합정보체계 미입력)를 추가해 건설자재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했다(제31조 제2항 제7호 마·바·사목).

구조물에 중대한 과손을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 적용 기간을 공사 착공부터 하자담보 만료기간까지로 확대했다(제85조 제1항). 지금까지는 공사 준공부터였다.

이번에는 신설 조항도 있다. 정부는 건진법에 제87조의2를 새로 만들어 건설기술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자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했다. 그리고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업자와 건설업체 간에 신기술 사용 협약체결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했다(제14조의2).

건설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령집>이 건설기술의 부흥과 안전을 강화하는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남영기자 hnews@